

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5. 20.

발의자 : 조신행의원 외 10인

1. 제안이유

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와 북한 지역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.
- 나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- 다.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라.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.
- 마.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내지 제10조).
- 바.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합의사항 :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자치행정과와 합의되었음.
- 라. 기 타

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이라 함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의 법인,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·체육·학술·경제·보건·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대전광역시 또는 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2.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경비

제5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)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 2. 남북교류협력의 촉진
 3.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
 4.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
2.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
3.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

제6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며, 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"남한"이라 한다)과 그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조 (교역당사자 등) ①교역(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·「대외무역법」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이하 "교역당사자"라 한다)로 한다.

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